

野 ‘드루킹 특검’ 공세 보궐선거 연기 노리나

민주당 3곳·한국당 1곳

지방선거 출마의원 사직서 처리

14일까지 불발뎌 보선 불가

국회가 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일명 ‘드루킹 사건’) 특검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로 공전을 거듭하면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의 사직서 처리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현역 의원 사직서 처리에 대한 여야 쟁점이 엇갈리면서 여야의 태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현재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출마 현역 의원의 사직서를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지만, 야당은 여당의 드루킹 특검 수용을 내걸며 사직서 처리에 대한 발 물러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자신하며 처리에 적극적인 반면, 야당 입장에선 사직서 처리를 서두를만한 이유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합쳐 모두 4명이다. 민주당은 양승조(충남지사 후보)·박남춘(인천시장 후보)·김경수(경남지사 후보) 의원, 한국당은 이철우(경북지사 후보) 의원이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5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하자 이 지역구 4곳의 보궐선거가 내년으로 미뤄질 수



국회 공전 언제까지... 8일 오전 국회 의정각에서 열린 국회의원·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맨 왼쪽)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김성태(왼쪽 두번째) 원내대표를 부축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 있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 지역구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위해선 국회가 오는 14일까지 분회의를 열어 이들의 사직서를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국회 파행이 지속돼 14일까지 국회 분회의에서 이들의 사직서를 처리하지 못하면 이들 지역구 4곳에 대한 국회 의원 보궐선거는 내년 4월로 미뤄지게 된다.

민주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70%를 웃돌 정도로 높은 문재민 대통령 지지도에 힘입어 올해 재보궐선거 압승을 자신하고 있다. 울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국회 파행으로 의원 사퇴가 처리가 미뤄지는 게 내키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특검 수용’이라는 어려운 결단을 해줬는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여전히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것은 보궐선거를 무산시켜 작은 이익을 얻어보자는 일관된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상대적으로 느긋해 보인다. 특히 한국당은 여당의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국회 정상화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며, 여야 협상 결렬시 5월 국회가 종료될 수 있으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당이 야당 요구대로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방선거 출마 현직의원 사직서 처리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한국당 등 야당의 입장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의 지지율이 높은 올해보다는 내년엔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게 유리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같은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보궐선거가 제때에 실시되지 않는 것은 몰상식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6·13 선거 현장

교육감·군수 후보

최영태 “시민이 주도하는 교육혁신 추진”

광주 혁신교육감 시민경선 추진위원회와 최영태(64·전남대 교수) 혁신교육감 시민후보는 8일 ‘광주교육의 민주주의와 협치를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교육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시민원탁회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이 직접 광주교육의 혁신의제를 제시하면,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광주교육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겠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현장의 교육자치 역량이 성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이를 통해 혁신을 주도하겠다. 현장 중심과 시민 주도로 교육을 혁신하고 소수가 독점해 온 교육권력을 공유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시석 “어린이 종일반 방과후 교육 지원 강화”

윤시석 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후보는 8일 선거 1호 공약으로 “전국 제일의 교육환경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사에 바쁘고 맞벌이 부부가 많은 장성의 현실을 감안할 때 종일반 방과후 교육활동이 필요하다”며 “양질의 강사를 초빙해 아이들이 집에 가는 것보다 학교에 있는 것을 더 즐겨워하는 교육이 되도록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어린이집 야간 보육, 중·고교 신입생 교육 무상 지원, 장성 장학회 기금 대폭 확충, 고교 수업료 단계적 전액 지원, 고교 교과서 비용 지원, 에듀버스(중·고교 통학버스) 지원, 직업·진로체험 학습비 지원 등도 제시했다.

천경배, 섬주민 이동권·천일염산업 활성화 건의

천경배 더불어민주당 신안군수 후보가 최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신안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천 후보는 지난주 목포시청 세월호 직립작업 현장점검을 위해 목포를 방문한 김 장관을 만나 섬주민 이동권·생존권 보장, 천일염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천 후보는 “신안 주민에게 뱃길은 주민 생명과 직결돼 있다”며 “건강권과 이동권 등 헌법에 보장된 주민 생존권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여객선 운항통제 조정 협의체 구성·운영 ▲시계제한 완화 관련 법 개정(현 1km→0.5km) ▲최신 장비 도입된 여객선 통제 완화 ▲해경 및 해군 경비경 운항 유도 지원 ▲천일염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승욱, 농축수산업 활성화 등 7대 공약 제시

이승욱 더불어민주당 강진군수 후보는 8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집권당 군수가 필요하다. 정부와 소통하고 교류해서 지역발전 앞당겨야 한다”면서 “강진 발전을 위해 어떤 후보가 적합한 지, 거기에 맞는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이 후보는 “소통행정으로 화합과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는 군수가 될 것”이라며 “강진원 군수의 좋은 정책을 승계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 농축수산업·상공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문화예술 접목한 관광산업 육성, 복지공동체 실현, 기반시설 확충, 적극 소통 등 7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정욱·김형호 기자 jwpark@kwangju.co.kr

민주 국회의장 후보 문희상·박병석 압축

이석현 불출마 선언 이어 원혜영 “재검토”

더불어민주당의 제 20대 국회 후보인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양자대결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초 문희상(6선), 박병석·원혜영·이석현(이상 5선) 의원 등 4명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석현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이어 원혜영 의원이 ‘출마 재검토’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원 의원은 8일 “사실상 우리당에서 후반기 국회의장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굳이 집안싸움 모양새를 보일 필요가 있겠느냐”며 “출마 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의장직에 도전하는 일을 2년 후로 미루고자 한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원 의원은 국회의장 후보자 등록 일인 오는 10일 전까지 입장을 정리해 밝혔

정이다.

원 의원이 ‘불출마’ 결심을 굳히면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문희상 대 박병석’ 2파전으로 치러진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오는 10일 후보 등록에 이어 16일 실시된다.

한편,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도 노웅래·홍영표(기호 순) 의원의 양자대결로 오는 11일 치러진다. 지난주 출마선언 이후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입법 성과를 내는 원내대표가 되겠다”며 “원내대표에 당선되면 민생법안 30여 건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홍 의원은 공약 발표 등 공개적인 경선 레이스를 펼치는 대신 동료 의원들과 조용히 접촉하며 지지세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금감원, 금융위에 반기 들 수 있어야”

윤석현 신임 금감원장 취임

윤석현(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의 본질을 위험관리로 규정하고 감독정책의 정체성·독립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원론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필요하다면 금감원이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에 반기를 들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금융위·금감원 간 새로운 관계 정립을 예고하고 있다.



은 금융산업정책을 펼칠 수 있고 금융회사들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혁신에 전력(傳力)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윤 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제13대 원장 취임식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취임사 서두에서 “잠재 위험이 가시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동시에 현실화된 위험에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금감원이 오롯이 집중해야 할 금융감독의 본질”이라고 규정하면서 “금감원이 국가 위험관리의 중추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이 제대로 돼야 정부가 올곧

은 원장은 “금융감독원(金融監督院)이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금융을 감독하는 것”이라면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금융감독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언급, 금융위와 관계 재정립을 예고했다. 이는 감독정책을 집행하는 금감원이 금융정책을 수립하는 금융위의 예하 부대가 되는 것은 안 된다는 문제 제기의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